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고삐'

### 전주시, 다음달 5일 국회서 법제화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여·야 3당에 당론 채택 촉구도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여·야 3당 대표를 방문해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에 나선다.

전주시는 다음달 5일 국회에서 전국 혁신도시 단체장과 지역별 국회의원,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지난 8일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인재 채용의무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만남을 속도감 있게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대 총선 직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여·야 3당 전북도당을 잇달아 방문해 법제화 필요성을 알리고 정식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북지역 4년제 대

학 총학생회장단과 부총장단과의 긴급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4일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선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는데 이어 청와대와 국토부장관, 3당 대표 및 원내대표, 지역발전위원장 등에 정식 공문으로 전달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지역청년으로서,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간절히 바라는 소시민의 절실함을 담고 있는 호소"라며 "반드시 제20대 국회

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총 4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는 15% 수준인 67명에 그쳤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법제화되면 91명이 늘어난 158명까지 지역인재가 채용된다.

/김영재 기자

## 전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 "농촌 작은학교 살리자"

이해숙 "학생 60명 미만 278곳"  
최인정 "누리과정 예산 선 집행"  
최영일 "민간자율방재단 지원"

전북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작은학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살리기, 누리과정 추경 편성, 민간자율방재단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날 5분발언은 이해숙(전주) 의원, 최인정(군산) 의원, 최영일(순창) 의원이 나섰다.

#### ▲이해숙 의원 = 농촌 작은학교 활성화 통해 농촌 붐과 막아야

이 의원은 "2016년 현재 전체 전체 학생수가 6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가 총 278개교에 이르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 절반에 가까운 45%가 6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199개교에 이른다. 이들이 중등학교에 진학할 때 쪼면 농촌 붐과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 산내면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50여명에 달하고 농촌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체 학생수가 100여명이 이른다"면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 작은학교 지원센터 설립,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다양성 보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충만한 지사와도 교육청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 산내면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50여명에 달하고 농촌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체 학생수가 100여명이 이른다"면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 작은학교 지원센터 설립,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다양성 보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충만한 지사와도 교육청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인정 의원 = 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집행 추진과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적극성 주문

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2015년 도 교육청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이율액이 194억원이나 되는 것은 도교육청 회계 예산편성과 운영지침과는 거리가 먼 예산운용이라고 고집했다.

최 의원은 "추경예산은 일단 성립된 예산을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므로 변화에 대응이 순습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물리적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집이 가진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어린이집을 위해 도에서 먼저 예산 집행을 하고 도 교육청에 대해서 세입을 요구하는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도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최영일 의원 = 안전 전북 외치지만 지원은 커녕 뒷집만 지고 있는 전북 현주소 질타

최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3,445명의 민간자율방재단은 사전 재해 예방과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그리고 사후 복구활동에 참여해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자율방재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보조가 필요하는데 재원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북은 2014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길게는 10년 동안 놔 놓고 보고만 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민간 조력 역시 연합회 구성과 임원임기, 의결 등 연합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절실한 내용들로 도배돼 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북도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각종 재난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재난 관리체계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력만 갖고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율방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국민의당 김수민 의회 해법 모색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회 해법 모색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21일 오전에는 김수민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법조비리 근절과 검경 수사권 독립,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김수민 의원의 관계 없이 법조계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 주장을 폈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은근한 견제구간 해석이 나왔다.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형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와함께 야당 공조 카드에도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국회법개정안 제의에 이어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추구결의안 공동 제출 등으로 대어(對野)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도 20대 국회에서 순차 통과시키기로 야당 간 합의를 이뤄냈다. 또 당 소속 어버이연합 TF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지원 의혹 규명을 위해 21일 오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서별관 청문회 등 이슈들에 대한 야당 공조 과정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야권 관련 현안 공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맞췄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겠다던 국민의당이 '야성'을 본격화하며 야권 관련 현안 이슈를 주도하는 데에는 다분히 김수민 의회 해법 모색을 위한 움직임이 엿보인다.

실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당 차원 차원의 현안 활동보다는 야권을 규합한 '내어공조'는 왜야 김수민 의회 해법 모색을 위한 이슈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성주 기자

## 김종인 "경제민주화 거대경제세력의 국가지배 막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경제민주화에 대해 "거대경제세력이나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한다"며 "우리 상황도 발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성주 기자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야권 반응 제각각

### 더민주 '정부 책임'... 국민의당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해'... 정의당 '당연한 귀결'

야권은 21일 영남권 신공항 선정이 백지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반응을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갈등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제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신공항 결과 발표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지역갈등의 측면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내린 중립적 결정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사회와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해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북·밀양 주민 및 부산·경

남 주민 여러분의 상실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공항 문제는 10년 동안 갈등만 유발했다. 돌고 돌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다"고 이날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으로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작년 해당 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신공항 선정과 관련해 정부 용역결과에 맡기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결정까지 이렇게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신공항 용역과정 및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차원에서 되짚어 볼 것"이라고 향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정의당이 꾸준히 얘기해 왔던 것이 받아들여져 다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는 신공항 선정에 있어 수요예측, 경제타당성 등을 볼 때 인 천공항이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 입지 선정) 정치적 편에 따라 갈등 국면으로 끌고 갔다"며 "비록 정치적 문제 의식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또 이윤인해 지역 간 갈등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이날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되면서 가덕도 유치가 무산되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해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약속했지만 해당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뿔 뿔'은 민심의 질책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타났다.

/이성주 기자

## 정치권 "새만금 인프라 구축 적극 투자를"

### 김관영 의원, 삼성 투자 사실상 철회 관련

삼성-새만금 투자 MOU 철회 논란이 일던 틈을 타 정치권이 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새만금 예산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새만금개발청의 삼성-새만금 투자 MOU 철회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투자 확대만이 논란 재발을 막고 실질적

새만금 활성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새만금의 발전상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SOC 등 기본적인 투자 여건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최종 결정을 꺼리고 있다는 게 새만금 투자 설명회 일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한사대 안 시대를 준비하는 국책사업 답게 도로·철도·공항·항만·매립지 상하수도·전기 등 여러 인프라 조기 구축이 필

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MOU 유지 입장을 밝힌 삼성에 "국민 기업답게 당초 맺은 MOU의 엄중함과 국민적 신뢰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지난달 17일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정부에 전한 이후 논란이 일자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철회, MOU는 유지, 신규투자 시 새만금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초 계획 변경도 문제지만 향후 대책과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 환경연, '가습기·미세먼지' 20대국회 입법과제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20대 국회 입법과제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21일 20대 국회가 다루야 할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다루야 할 정책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과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감축 ▲원전 중단 ▲화력발전소 폐쇄 ▲국립공원 케이불가 중단 ▲파손된 댐 철거 ▲바다 생태 보전 등을 제안했다.

/인진수기자